

“꽃게 선물 감사한데...” 경찰·소방 처리 방법 ‘고심’

익명 기부자, 지구대·119 센터 등 약 30곳에 전달 공무원행동강령상 위문품 수수 불가...반환 등 착수

“익명 기부자의 꽃게 선물 매우 감사하지만...”
 광주 경찰·소방당국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꽃게 선물(사진)’을 받았지만, 고심에 빠졌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문품’ 성격이 수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경찰은 반환을, 소방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8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른 오전 시간대 관내 지구대와 119안전센터 등 약 30곳에 2kg 상당의 생물 꽃게가 담긴 상자가 배달됐다.
 상자와 함께 온 A4용지 1장짜리 인쇄물에는 “저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꽃)안꽃게를 준비했다. 농수산물



이므로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편하게 드셔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꽃게 상자는 경찰·소방관서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 복지시설 등 광주



280여곳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자의 마음과 달리 경찰과 소방당국은 꽃게 상자를 두고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행정 목적 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금품을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지만, 살아있는 꽃게인 탓에 상할 수도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심 끝에 경찰은 꽃게를 모두 돌려주기로 결정, 이날 배달 기사 등을 수소문해 기부자와 연락을 취했다.
 소방 당국은 우선 정확한 개수를 파악한 뒤 9월 자체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 꽃게가 상하지 않도록 냉동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원칙상 어떠한 위문품도 받을 수 없어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따뜻한 말과 함께 기부품까지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품을 돌려 드리더라도 기부자의 성의와 그 마음을 온전히 받은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지진나면 이렇게 대피해요” 최근 대만과 미국, 일본 등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대피 요령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광주 북구 신안동 국공립 태봉어린이집에서 재난안전 교실이 열려 아이들이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안내로 대피 방법을 익히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의료진 과실로 ‘척추 장애’...병원·의사 책임 50%씩

광주기독병원 의료소송서 패소...3억2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척추 수술 이후 환자의 장애에 대한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 비율을 50대50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원고 5명이 광주기독병원과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독병원 의료법인과 의사가 함께 A씨 등에게 총 3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광주기독병원

원에서 요추 4·5번 및 천추부에 ‘경막외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SEL D)’을 받고 요추 1번 아래 부위인 마미신경근(척추신경근의 집합)이 손상됐다.
 이로 인해 양쪽 하지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25-50% 내외로 떨어지고, 목욕·배뇨·계단 오르기·보행 등을 할 수 하지 못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A씨 측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전 하지마비와 마미중후근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마미를 손상했고, 후유증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마미중후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더라도 관련 증상을 포함한 시술의 위험성은 설명했으며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의 책임 비율을 50%씩으로 정해 환자 A씨에게 3억1천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가족 4명에게 2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안재영기자

‘홍보방송’ 없었던 22대 총선 사전투표 왜?

중앙선관위 제작 불구 광주 5개구에 전달 안돼 유권자들 “신경 안써” vs “의도적” 등 뒷말 시끌

지난 5·6일 진행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예년과 달리 조용(?)했다는 뒷말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 독려’ 음성 파일을 사용한 ‘홍보방송’을 했으나, 이번에는 북구지역에서만 이뤄졌다.
 이는 나머지 자치구들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음성 파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북구도 사전투표일 이를 전까지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요청한 뒤에서

야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 독려’ 음성 파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권의식양상을 위해 만든 것으로 통상 ‘사전투표’, ‘본투표 전·당일’ 등 3가지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전에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음성 파일을 배포했으나, 이번에는 이 과정이 패싱돼 기껏 만든 ‘투표 독려’ 홍보물을 광주 자치구 대부분 쓰지 못했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번 이틀간의 사전투표일이 앞선 선거보다 조용했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홍보방송을 인식하지 못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또 다른 이들은 “사전투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상 단순 누락”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본보 취재가 시작된 전날 오후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에 직접 ‘본투표 전·당일’ 투표 독려 음성 파일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로부터 3가지 음성 파일 모두 제작 완료됐다는 공지를 받았는데 당시 각 자치구 선관위에도 동일하게 안내가 이뤄져 사전투표 전 추가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안재영기자

선거 공보물 70대 입주민이 ‘씩씩이’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입주민이 모두 가져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이날 오전 접수됐다.
 현장에서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확인한 신용동 행정복지센터는 입주민 A(70대)씨가 선거 공보물을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과거에도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를 입주민 등의 없이 수거해 입주민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등을 탈취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재영기자

‘여직원 강제추행’ 이사장 송치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 한 제2금융기관의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이사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이사장은 2022년 1월 은행 내 탕비실에서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내용과 함께 회의 도중 성기를 빚대어 표현한 특정 시의 구절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혐의다.
 /주성학기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